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동양저축은행 임직원 일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956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1월 9일 (음력 12월 2일) 수요일

혁신도시의 중심지역을 누리는 3,813 최대낙첨!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이명박 정부' 공기업 민영화 … 한전 등 매각 추진

나주 혁신도시 '껍데기'만 오나

지방이전 계획 '물거품' 우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전 및 자회사의 분할 매각이 추진되고 있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전 및 자회사의 민영화는 본사의 지방 이전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한전 등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등을 고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분할매각 방안을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 및 준정부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보고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한전기공 및 한전KDN 등 한전의 출자회사는 물론 한국전력거래소 등 관련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맞춰 한전 및 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화 방안을 보고했다"며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과 한전기공,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등의 민영화가 현실화되면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은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민간기업의 본사 이전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전 및 한전자회사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전과 한국전력거래소, 한전기공, 한전KDN은 직원만 2천100여명에 달하는 등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전 등이 분할매각 등을 통해 민영화가 된다면 본사의 혁신도시 이전 문제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본사는 혁신도시에 둔다'는 전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에서는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 국가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민간에서 경영하는 싱가포르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차질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사실상의 민영화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이에대해 지역민들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해 지역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고, 그 중심에 한전이 있는데도 새로 들어설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이유로 한전을 민영화한다면 한전 이전이 실질적으로 어렵게 되고 껍데기 뿐인 혁신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날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 구체적인 대상이나 기관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방안을 확정해 대상 기관과 민영화 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기름유출 한달 … '깨끗해진' 태안 '타르 범벅' 무안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구랍 6일 발생) 한달이 지난 현재 충남과 전남 해안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름유출 한달째인 지난 6일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백사장이 100만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청정해역의 옛 모습을 되찾았다 〈위〉. 같은 날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해안은 시커먼 타르덩어리들로 뒤덮였다 〈아래〉.

/대전일보 = 빈운용 기자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초·중학생 자비 조기유학 자율화

인수위, '군병력 18만명 감축' 안보상황 맞게 재조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초·중학생의 자비 조기유학을 중장기적으로 자율화하고 병력 18만명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20'을 안보상황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인수위는 또 신문법을 폐지,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중학생의 해외유학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나 현행 규정상 초·중학생의 자비 유학은 불법으로 돼있어 이를 고쳐 중장기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현재 68만명인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2020'을 안보상황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국방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또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문광부로부터 보고됐다"며 "이에 대해 인수위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등에서는 '조·중·동 보호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와 관련 박정하 인수위 부대변인은 "상반기 중으로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면서도 "업무보고에서 예산처는 민영화 대상 기업을 나열하고, 민영화 방안으로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림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onnam-tsc.kr

이천 냉동창고 화재

희생자 14명 신원 확인

7일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지하 1층 기계실에 인화성 증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불꽃 등이 튀면서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기사 7면〉

경찰은 8일 오후 2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방재청 화재조사반,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감식반(19명)을 꾸려 화재현장에 대한 정밀감식을 실시했다.

화재로 숨진 40명 중 이날 오후까지 1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그러나 나머지 26명은 시신 손상 정도가 심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로 얼굴 등 신상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중이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숨진 40명의 합동분향소는 이날 이천시민회관에 마련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안·무안·영광 '특별재난지역' 건의

전남도, 타르 유입 김 양식장 등 피해 심각

전남도는 8일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로 인해 김 양식장 등에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신안·무안·영광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소방방재청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관련기사 3·7면〉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랍 30일부터 지난 2일 사이에 강한 북서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전남 서해안 지역에 타르 덩어리가 유입돼 김 양식어장과 마을어장에 타르 덩어리와 흡착포 등이 달라붙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선포를 건의한 이들 지역에는 모두 752건 1만891ha의 각종 해조류, 어패류 양식장이 있으며, 이 가운데 김 양식장이 370건 7천891ha에 달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무안과 신안 지역 김 양식장에는 김발과 엽체에 타르가 달라붙으면서 시설물 철거와 함께 채취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며, 앞으로 어패류 양식장과 마을어장 등에도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민 긴급 생계지원금과 긴급방제용 특별교부세, 재해대책예비비 등의 예산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어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등 금융·세제 관련 지원도 이어진다.

도가 이날까지 조사한 결과 타르로 인한 수산피해 총 면적이 2만3천여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리가 시작된 7~8일 양일간 추가적인 타르 유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